

南北정상회담, '8월말·평양' 유력?... 오늘 합의 가능성

오늘 남북고위급회담

조명균 장관 등 남측대표 4명 참석
4·24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
청와대 "제3의 장소 가능성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방명록에 글을 작성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옆에서 있다. /청와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도 8월 말로 잡힐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4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대한다는 언급이 단순한 기대이나, 아니면 협상에 근거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을 거론하고 방북단이라고 한 게 평양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제가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지만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것은 원론적인 말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언론이)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남북이 내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다만, "지금 시구나 장소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말할 대로 시·장소·방북단 규모에 대해 내일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선부르니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13일 회담에서 이달 말 회담을 제안할

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남북 당국은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도 회담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남북 사이에 이미 여러 공식·비공식적 채널이 많이 있지 않으나"면서 "실무회담만 해도 몇 가지가 굴러가고 있는지 손꼽기 어려울 정도인데 여러 채널을 통해 내일 회담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과도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말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과 정보를 교환·협의를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미국쪽 반응에 대해 들은 바 없으나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대표단에 철도·도로 등 경험 관련 인사들이 있는데 경험 진전이 더딘 데 대한 항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묻자 "철도·도로·삼림 분야에 대한 실무 협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도 얼마든지 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우리 대표단 4명 외에 실무 수행원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도 같이 가기에

현장에서 어떤 의제가 나와도 협의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남판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 김 대변인은 "남 차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동행하는 차관급으로서, 청와대의 관련 업무 담당자이고 비핵화 문제와 4·27 합의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선순환을 하기 위한 회담으로,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을 촉진하고, 북미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고위급 회담엔 우리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판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온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보험상품, 투자상품과 동일하게 보면 안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주요쟁점

금융위, 연내 법제화 목표 추진
소송중지 제도 등 세부내용 이견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국회 법제화를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다수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통합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체계화했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양승헌 연구위원은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가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추진과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양 연구위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과 관련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다수 가입자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원본 손실

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상품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에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정안은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

소송중지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중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조정절차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소송중지 여부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소송이탈 금지제도와 관련해선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제기가 금지된다"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면서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은 지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1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어 불완전 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신금융협회에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전액 부담과 수수료율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대해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확대방안 추진

〈연매출 2400만원~3000만원〉

내일 소상공인 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 타격 자영업자 지원 카드수수료혜택 일부확대 방안 검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렸다.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광주, 화성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촌과 남대문, 안암동, 후암동 소상공인을 만나 점검한 결과, 이 일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례로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580만원을 내는 후암동의 한 고깃집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4000만원에 달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단,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으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